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7. 7.(금) 조간
(인터넷) 7. 6.(목) 12:00

광주·전남 지역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친환경(그린)에너지 전력저장설비(ESS)발전 특구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등 3개 특구 방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광주 규제자유특구(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친환경(그린)에너지 전력저장설비(ESS)발전특구)와 전남 규제자유특구(개조전기차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 신산업인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그린)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특구는 자율주행 특장차라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남 개조전기차특구는 노후화된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개조(튜닝)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 친환경(그린)에너지 ESS(전력저장설비)발전특구는 태양광 전략저장설비(ESS)발전소를 구축하고, 전력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장의 실험장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자유특구가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정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지원단 특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노진상 (044-204-7220)
		담당자	사무관	이건준 (044-204-72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로 신사업 분야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한 **구역**

*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지역 단위 Zone 개념 적용이 특징적)** 총 6종 시행 중

○ **(법·조직)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시행**('19.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설치**('19.5)

□ **(지정절차)**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

특구 계획 신청	→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특구 계획 사전심의	→	심의·의결	→	지정·고시
시·도 → 중소벤처기업부		분과위원회, 관계부처		심의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중소벤처 기업부

* 심의위원회 :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차관급) 21명, 민간 21명, 안건 사전검토, 특례 심의 등
** 특구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간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장관급) 19명, 민간 21명, 특구지정 심의·의결

□ **(지정혜택 및 지원)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2+2년)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

○ **규제 제약 없이 실증,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기준요건 미비, 적용이 맞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 기존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입지, 환경, 도시계획 등)

○ 실증을 위한 **R&D**(국비:지방비:민간, 7:3:2), **인프라 구축**(국비:지방비, 5:5) 및 **사업화 예산 지원**

* 최근 3년간 예산 : ('21년) 1,653억원 → ('22년) 1,238억원 → ('23년) 705억원

□ **(보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